혹여 선거법에 걸릴라…지역행사 줄줄이 차질

조기대선에 불똥 튄 광주·전남 행사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서구 운영비 지원은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해당
5·18행사위 교통통제 간담회-주민자치위 모임 개최 금지에 축소 개최
무안황토갯벌축제 9월로 연기…주남마을 인권문화제도 대선 후로 미뤄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애꿎은 지역민들이 혹여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지역 축제·행사를 뒤로 미루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여는 마을 행사나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임을 연 것처럼 비쳐 '불법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너도나도 행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열어왔던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를 9월 이후로 미뤘다.

1980년 당시 양동 노점상인들과 5·18서구행사위원회, 양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여는 행사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다.

문제는 이 행사의 운영비가 광주시 서구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자치 예산'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서구가 양동에 직접 제공한 지원금으로 행사를 열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전반을 '기부행위'로 정하고 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8일 5·18 전야제 등을 위해 금남로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충장동 주민들과 교통대책 간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으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기존에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을 불러모았는데, 충장동으로부터 "선거 기간이라 모임을 열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사위는 충장동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려 간담회 참가자를 모아 10명도 채 못 모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치러야 했다. 그나마 주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금남로공원 앞 사거리 한 가운데에 무대를 세운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금남로 3가쪽으로 무대를 이동시키는 등 행사 규모도 축소해야 했다.

무안군 또한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황토갯벌축제를 9월로 연기했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 여는 행사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인권문화제를 오는 6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는 5·18 당시 계엄군의 버스 총격 학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어 온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됐다.

추진위는 그러나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열리는 행사인 점을 감안, 자칫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5월 동안 참배객들이 찾아와 추모할 수 있도록 위령비 인근에 추모 공간은 마련해 둔다는 방침이다.

김재림 기역이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시 측에서는 행사를 5월에 열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 때문에 트집이 잡힐까 봐 우려된다"며 "행사를 여는 주남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어르신인데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의미가 일부 퇴색되더라도 행사를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정부·항공사 등 고소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 무안공항 관제사 등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공항시설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제사와 관제 책임자, 제주항공 정비본부장·안전보안본부장·정비담당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금호건설, 감리업체 등 공항 구조물 설계 및 시공관련자, 한국공항공사 대표 및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무안공항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해 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호 변호사(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장)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벽화 그리기 전남대 학생들이 1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그날의 벽화 그리기' 행사에 참여해 직접 그린 '광주민중항쟁도'를 모아 붙이고 있다. 광주민중항쟁도는 전남대 사범대 1호관 벽면에 그려진 벽화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최초의 벽화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의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 국가배상 책임 없다"…2심서 뒤집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하며 이 사건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사업 과정에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심과 달리 지열발전사업과 지진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 9881명이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